

제동 걸린 광주 문화수도

조성추 구성도 4개월째 표류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반영과 2010년 완공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4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출범한 제1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 송기숙)는 지난 3월 말로 임기를 다했으나 신임 위원장(송재구 전 광주시 부시장)만이 4월 중순에 내정됐을 뿐 위촉직 민간위원(15명)의 선임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7일 송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제2기 조성위원회를 출범시키려던 계

위원장만 내정... 민간위원 선임 늦어져 특별법 국회통과 등 주요 업무 차질

획 자체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성위원회가 4개월째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할 위원회가 장기간 출범하지 못한 이유를 놓고 문화계와 지역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송재구 내정자가 추천한 위촉직 민간위원 안과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추천 안이 다소 상이함에 따라 청와대의 위원 선별 작업이 더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추천

된 민간위원 중 일부 영향력 있는 학계 인사들이 조성위원회 참여를 고사함에 따라 적절한 인사를 다시 찾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통 관료 출신인 송재구 위원장 내정자가 심의 기구인 조성위원회를 실무 집행력이 가미된 조직으로 바꿔달라는 의사를 정부 측에 직간접으로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송재구 내정자는 조성위원회 발족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절차가 끝나면 공식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신임 민간위원 선정을 마치고 본인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의 마쳤다"면서 "오는 8월초 조성위원회는 출범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집행기구 성격인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과 별도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에 대해 무모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 민간위원 15명과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비하' 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왼쪽)과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김철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24일 윤리위에 출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한나라당윤리위에서 참석자들이 '수해 골프'와 '호남 비하 발언' 당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비하’ 솜방망이 징계”

한나라 광명시장 경징계 비난 정치권·네티즌 “출당 시키려”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제재 조치와 이 시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치' 징계 조치와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최고위원회의 '탈당 권유'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당과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해 1년간 당원권 정치 처분을 했으나 최고위원회는 제재수준이 낮다고 판단,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탈당을 권유할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되지만, 최고위원회의 제재수준 상향 결정은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과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 등 호남권 위원장들은 이 시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원권 1년 징계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에 대한 경징계 조치는 과연 한나라당이 지역감정 선동주의자를 색출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당 조치 등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

광명시의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은 모든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 시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이 출당조치를 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명시 호남항우회연합회도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범시민대책위 등을 구성, 이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광명시청 홈페이지에도 이 시장의 발언이 알려진 지난 21일 이후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당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 'shin1538'은 "특정지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당원권 정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은 한심한 처사"라고 지적했으며, 'youare'는 "(당내) 인맥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국민과 지지자를 입장에서 징계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시장은 시의원과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자리에서 백재현 전 시장의 퇴임 직전 이뤄진 호남인사에 대한 승진인사 보고를 받고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강운태 “대권도전 선언 유효”



본격적인 조직 다지기 나서 정치권 “정계개편 역할 모색”

지난 2004년 총선 패배 이후 올 들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불출마,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민주당 탈당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강운태 전 의원이 대권 도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직 다지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강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리면서 도 정계개편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강운태 전 의원은 "일부에서 나의 대권 선언에 대해 무모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 초에는 이러한 우려도 없어질 것이며 대권 도전 선언은 유효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강 전 의원은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는 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단체로 연말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구성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 전 총리와와의 관계에 대해 강 전 의원은 "나의 활동은 고 전 총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며 "최근에는 고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 전 총리와와의 연대설을 부인했다.

강 전 의원은 정계개편과 관련 "현재의 열린

우리당이나 민주당은 정치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며 "결국 내년 초에는 새로운 정치의 큰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의 정치 체제로는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한 강 전 의원은 "이제 봉사의 정치라는 큰 틀에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성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이 같은 강 전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류다. 일단 강 전 의원이 조직하고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에 알찬 정치권 인사나 유명 인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별다른 정치적 흡인력이나 폭발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선언도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서 기존에 거론되는 대권 후보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점에서 별다른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강 전 의원이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의 전국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차기 정계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선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결정으로 꼽히고 있다"며 "그러나 강 전 의원이 대권 도전 선언과 조직 구성을 통해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15 특사, 재벌 총수·정치인 포함될까

당·청 내부 선별작업 착수

청와대가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선별 기준 등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도 사면·복권 대상 선별을 위한 검토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8·15 특별 사면·복권 기준에 대한 내부검토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해 청와대에 건의하면 법무부는 청와대의 언질을 토대로 사면·복권 대상을 신속히 검토해 제청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이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에 연루됐던 재벌 총수들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당 이복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징금과 벌금을 다 낸 경미한 경제 사범과 화물 과적차주, 행정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과실범, 교량주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만으로는 재벌 총수 사면이 이뤄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법무부 주변에서는 여러 명의 기업인들이 벌써부터 사면 수혜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현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 총수는 SK 손길승 전 회장과 최태원 회장,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다.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 2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제청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 위원장은 정치인 사면복권 건의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요한 여운을 남겼다. 정치인 사면복권이 단행될 경우에는 2002년 대선자금과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역시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새롭게! 상쾌하게!
코카-콜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카-콜라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더 맛있고 더 상쾌한 코카-콜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더 맛있고 상쾌한 코카-콜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더 맛있고 상쾌한 코카-콜라를 찾아주세요.

코카-콜라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더 맛있고 더 상쾌한 코카-콜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더 맛있고 상쾌한 코카-콜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더 맛있고 상쾌한 코카-콜라를 찾아주세요.